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4.01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정부,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꾀한다 p.1
- 02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 p.2
- 03 "중동 전쟁 4주 차" 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p.4
- 04 무역위, 산업용로봇 덤핑 최종 판정 일본·중국산에 최대 19.85%부과 건의 p.6
- 05 정부,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p.7

1

정부, '한·몽골 CEPA' 협상 가속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꾀한다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 모색 및 핵심광물 공급망협력 확대 제안

정부가 잠정 중단되었던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월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몽골 CEPA를 가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한국·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했지만 몽골 내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의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다. 이번 협의는 2024년 11월 4차 공식 협상 이후 재개된 것으로 협상 범위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까지 확대 제안했다.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자동차, 무기, 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희토류의 경우 전 세계 부존량의 약 16%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몽골 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을 만나 핵심 쟁점인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또한 다시푸를 부리아드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CEPA 내 별도의 챕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의 크지 않은 시장이지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인 '젊은 국가'다. 최근 한류 열풍과 맞물려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몽골 수출액은 2021년 3억 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억 6,000만달러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2025년 기준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화장품은 22% 상승했고 라면 8%, 스낵 40%, 조미김 3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신흥 시장이자 중요한 자원 협력 파트너인 몽골과의 CEP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장벽을 낮추고 핵심광물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및 플랫폼 구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부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올해 중소·중견기업 500개사에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3월 25일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ESG 규제를 넘어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경영을 수치화해 이해관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은 협력사에 ESG 데이터를 제출 및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등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최근 EU 공급망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속가능경영 기반 산업경쟁력 확보

산업부는 조선, 방산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500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하며, 2030년까지 ESG 전문 인력을 2,500명 수준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추가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와 협력을 통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실무 연계형 인턴십(100명 규모)을 운영한다.

또한, 컨설팅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자격제도'를 개발하고, 2028년부터는 전문 ESG 컨설팅 법인 지정제도를 신설해 시장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 글로벌 표준 및 규범화 대응 역량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ESG 제도 수립 과정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정부 간 협력채널(한-EU 산업정책대화 등)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KOTRA 무역관을 통해 글로벌 ESG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ESG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자율적 실천 및 확산 기반 마련

중소 협력사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여러 원청사에 중복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자료 입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2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및 플랫폼 구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더불어 기존의 사회적 책임 기반 지수를 'K-ESG 지수'로 전면 개편하고, 이와 연계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ESG 합동 지원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함께 체결됐다.

3 "중동 전쟁 4주 차" 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나프타 수출통제·물류 지원까지 전방위 조치

중동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 비상이 걸린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공급망·수출 지원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3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2월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3월 12일 100달러를 넘어서며 약 41% 급등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커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금융시장 역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환율과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과 운송비 부담 증가 등 현장 애로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휘발유($\Delta 7 \rightarrow \Delta 15\%$)와 경유($\Delta 10 \rightarrow \Delta 25\%$)의 유류세 인하 폭을 각각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휘발유는 기존 대비 15%, 경유는 25%까지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버스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UAE 원유 도입 확대, 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기업 간 체결한 LNG 스왑, 국제공동비축 활용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동시에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나프타, 요소, 비철금속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는 23일 공급망 위기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예외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나프타 취급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이 추진된다. 요소·요소수는 매점매석 금지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수급 안정화를 유도한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3 "중동 전쟁 4주 차" 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나프타 수출통제·물류 지원까지 전방위 조치

또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연간 공급계약을 확대하는 등 비축 물량을 확충하고 유가와 관련 있는 아스콘, 종량제봉투, 건설자재는 가격·공급 상황에 실시간 모니터링해 가격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식의약품 포장재 수급 동향과 생산차질 현황도 점검해 필요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총 1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대체 수입 비용 증가분에 대한 금융 지원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등도 포함된다.

①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② 공급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으로 유가 상승에 적극 대응 -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점검 강화 등 공공요금·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위기대책본부 즉시 가동, 수급조절·금융지원·모니터링 강화 - 나프타·요소·비철금속·유가연동제품 등 핵심품목별 비축 및 수급관리 강화
③ 취약부문 피해 지원	④ 외환·금융시장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물류비 직접지원 확대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고유가에 취약한 소상공인·농어민·화물·여객 등 취약계층 지원 지속 - 고유가 취약업종 위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둔화 우려에 선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적기 대응 - 관계기관 공조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점검, 리스크 관리 강화

출처: 재정경제부

■ 수출기업 피해 대응 강화...물류비·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 완화 지원대출,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대출을 확대한다.

물류 부문에서는 범부처 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기업별 수요를 선사와 매칭해 물류 병목 해소에 나선다. 특히 수출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쟁 할증료·우회 운송비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한다. 긴급 바우처는 신청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유가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령 해운업은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대출 무담보 보증, 긴급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응을 통해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물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4

무역위, 산업용로봇 덤핑 최종 판정... 일본·중국산에 최대 19.85% 관세 부과 건의

국내 산업 피해 확인... 일본산에 17.45~18.64%, 중국산에 15.96~19.85%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해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면서 정부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3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와 관련해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자동차 차체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분류, 금속의 절단·드릴링, 약품의 혼합·분류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올해 3월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해 해외 현지실사, 주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최종판정으로 일본산 산업용 로봇은 17.45~18.64%, 중국산은 15.96~19.8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는 HSK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제8515.31-9010호에 해당한다.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최종덤핑방지관세율
일본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17.45%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18.64%
	그 밖의 공급자	18.08%
중국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15.96%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	18.72%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	19.85%
	그 밖의 공급자	17.77%

출처: 무역위원회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의 조사개시를 보고받았다. 중국산 폴리는 2024년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했으나 덤핑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5 정부,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전자적 전송 무관세 유지 및 WTO 법적 편입 추진 예정

디지털무역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인 전자상거래협정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66개국에서 임시 이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중인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4)에서 'WTO 복수국가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1998년부터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의제가 논의돼 왔다. 제2차 각료회의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선언' 채택을 시작으로 2017년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을 위한 공동성명이 있었고 201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일본·EU 등 76개국은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상을 개시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WTO 복수국가간 전자상거래협정'은 2019년 5월 협상 개시해 72개국의 합의로 타결됐다. 이후 해당 협정의 WTO 협정내 법적 편입까지 추진했으나 만장일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2026년 3월 28일 공동의장국(호주·싱가포르·일본) 및 우리나라 EU, 영국, 캐나다 등은 자체적으로 협정을 이행하기로 했으며 국내 절차를 완료한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은 공식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담은 것으로 ▲전자 거래 체계·송장·서명·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무역행정문서 전자본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 문서 단일창구 개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미부과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하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체계 마련 및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호환성을 고도화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신속한 협정 이행을 위해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등 다각적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디지털무역 비용의 절감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디지털무역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